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5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홍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kimn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방지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
함하여야 한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들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4. (생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 21. (생략)

② (생략)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충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충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주거기본법 】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과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